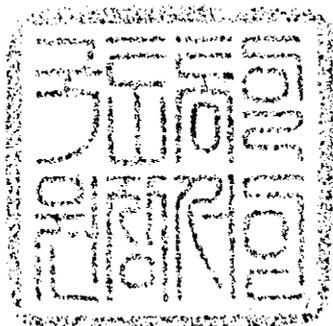


북한 사회의 자유화 촉진 방안

—수정주의 대두가능성과 관련하여—



366

1972. 5

김 영 국

서 론	3
1. 북한사회의 지속여건	6
2. 수정주의 이론과 실제	12
3. 북한사회의 수정주의 태두가능성	17
4. 자유화 촉진방안	23
가. 외국통로를 통한 방법	23
나. 접촉을 통한 방법	27
(1) 회담의 개최	28
(2) 인적교류	29
(3) 소비물자를 통한 공작	31

본 논문에 수록된 내용은
당원의 공신의견이 아님

서 론

자유화 경향은 다원화현상 또는 다부화 (polyarchism) 현상과 아울러 공산세계의 변질과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원화현상 또는 다부화 현상은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국가 상호간의 계층적 질서를 와해시키는 현상임에 반해서 자유화현상은 공산국가 내부의 전체주의적 통제기구를 와해시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공산권내의 국가간의 계층질서를 와해시키고 대내적 통제력을 약화시킴에 있어 크게 이바지 하고 있는 것은 현대 공산세계에 있어서의 수정주의 이다. 현대 공산세계에 있어서 어떠한 공산 국가고 간에 자국의 로선을 수정주의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수정주의는 오히려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의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중공은 소련의 수정주의를 규탄했다.

그렇다고 해서 소련이 자국의 로선을 수정주의로 자처하지는 않는다. 또한 동구의 공산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현상을 자유화 현상이라고 규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1971년 「브레즈네프」가 「유고슬라비아」를 친선방문 했을 때 자유화 따위는 유고슬라비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들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상의 논쟁과는 관계가 없이 수정주의적 요소는 이미 모든 공산국가내에서 보편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일찌기 「자주선언」으로 일국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유고슬라비아는 이미 공산권내의 이단자는 아니다. 반대로 유고스라비아 로선을 규탄했

던 소련도 수정주의 로선을 채택하였음은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소련의 수정주의를 규탄해 오는 중공도 외교정책면에 있어 전통적 맑스·레닌주의를 이탈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세계의 변질과정에 직면하며 북괴도 또한 이러한 공산세계의 추세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시련기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괴가 즉속하자면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북괴는 또한 대내적으로 공업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업사회는 일종의 테크노크라트(technocrat) 사회를 수반하게 되며 고도의 능률성을 요구하게 된다. 각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되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능률성이 요청되는 상황속에서 통제일변도의 지금까지의 통치기능은 상한선에 달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의 여지는 커질 것이다.

이미 북한사회에는 수정주의적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조성되어 있다. 공산권의 대세가 수정주의적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대외적 여건이고 공업화를 이룩하지 않고서는 존립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대내적 여건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북괴집단이 정치적으로 통제메카니즘을 강화하고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개인우상화를 강요하고 있음을 어느 의미에서 절망적 발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북괴가 현재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력적 침공보다는 수정주의의 태두이다. 만일 자유화경향이 자체내에서 일어나게 될

때 북괴집단은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유화를 촉구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도로임은 조만간에 들어날 것이 분명하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북괴의 현실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 사회의 자유화를 촉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려고 한다. 북한 사회에 관한 자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나날이 충실해져 가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떠한 체계적 연구를 할 수 있기는 아직도 미흡하다. 단편적인 자료를 근거로 어떤 가설을 정립함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사실간의 인과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적 방법을 따르지 않고 정책지향적 서술방법을 채택했다.

1 북한사회의 지속여건

객관적으로 보아 북한사회도 하나의 사회로서 국제적 환경속에서 사회의 존립에 필요한 대응체제를 갖추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 하나의 사회가 지속하자면 지속하기에 필요한 외적 환경과 내적 적응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냉정하게 북한사회를 분석해 볼 때 북한사회는 지금까지 사회내외로 부터의 때로는 급격하고 때로는 완만한 제압력을 극복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사회는 앞으로 시간의 흐름가운데 어떻게 지속할 수 있으며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현재의 사회체제를 수정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겠느냐가 우리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북한사회가 지금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환경적 여건과 대내적 지속기구(sustenance Mechanism)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환경적 여건을 살펴볼 때 북한 사회는 봉쇄사회적 성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외적인 충격이 면제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 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사회는 소련·중공 및 기타의 동구의 공산제국과의 교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후에 있어서의 공산국과의 교류는 주로 소련이나 중공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공산권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봉쇄사회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공산권 내부에 있어서의 교류는 사실상 봉쇄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상호교류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북한사회를 둘러싼 국제적환경에는 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북한사회는 종전까지의 봉쇄적 성격을 탈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공산권 자체가 이미 전후의 봉쇄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소련은 물론이거니와 동구의 여러나라가 서로 경쟁하듯이 중립국 또는 종전의 서방국가와 정치적·비정치적 공식적·비공식적 교류를 통해서 봉쇄성을 탈피해 가게 되었다. 그리고 급기야는 전형적 봉쇄사회를 이루고 있던 중공이 국제적 정치무대에 등장할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적대시해오던 미국과의 접촉을 시작하게 되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공산권의 해체이다. 스탈린 사후 이미 세계공산주의 로선은 없어지고 공산국가는 이제 제각기 독자적 일국사회주의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매몰되었던 각국 공산주의의 개별적 성격은 이제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어느 특정공산국의 이해관계는 이미 공산권 전역의 이해관계가 될 수는 없다. 근년에 들어난 「브레즈네프」이론은 공산권 (socialist commonwealth라는 표현을 흔히 쓰고 있다)의 공동이해에 저촉되지 않는 공산각국의 행동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론은 이미 공산권내에 전후와 같은 각국간의 계층질서가 없어졌음을 뜻한다.

이러한 공산권내의 변화는 북한사회의 외적환경의 변화를 뜻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괴에 대한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공산권내의 강대국은 이제 북괴에 대해서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반면 일방적인 지원도 하지 않게 되었다. '소련이나 중공 또는 기타 동구의 선진 공산국의 지원으로 대외적 환경에의 적응력이 결핍되어 있는 북괴는 이제 독자적으로 외적 환경에 적응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대내적으로 볼 때 북한사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여건은 단언해서 폭력기구(terror mechanism)였다. 북괴집단은 원시적 북한사회에 가장 원시적이 폭력기구를 가설해서 지금까지 북한사회체제를 지속시키고 있다. 이제 그 메카니즘을 본다면 정치적으로는 가장 원시적인 일인독재 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전쟁지향적 총동원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체제와 전쟁지향적 총동원체제의 명분을 「민족통일」 또는 남한의 해방에서 찾고 있다.

북괴집단에게 있어 남한의 존재는 자체의 지속을 위해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분단된 객관적 사실은 북괴의 통제메카니즘의 지속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 통제메카니즘은 매우 원시적인 것이나 끊임없는 상징조작(Symbol manipulation)과 폭력행사로서 지금까지 그런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다.

여기서 개인우상화 정책은 북한사회의 지속을 위해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스탈린 시대의 낡은 수법이기는 하나 폭력기구가 북괴집단에게 독점되어 있고 해방후 개방사회와의 접촉이 두절된 상태에 있는 북한사회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사회의 지속을 용이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은 중공업치중 경제정책이다. 소비재를 포함한 경공업의 진흥은 현체제의 지속을 위해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의 단기·장기적 경제 계획에서 또한 76년도까지의 6개년 경제계획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색의 하나는 소비재의 생산이 거의 도외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련의 소비재 생산의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그 차이가 들어난다. 즉 북괴는 보편적 궁핍상태속에서 불필요하고 수요도 없는 생산품을 과잉생산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괴는 독선적인 민족주의 개인우상화 관료화한 조선노동당 그리고 개인생활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총동원체제와 소비생활의 억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적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현재의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이미 생기고 있으며 그동안의 북괴의 미봉적인 적응력으로서는 도저히 적응이 불가능하게 된 제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인 면으로 보아 북괴는 명분없는 외교통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을 보여왔다. 중립국이라고는 하나 비공산 국가와 외교망을 확대했다. 인도네시아와 외교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부터 이미 정통적인 로선에는 한계가 온 것이다. 이러한 이른바 「중간지대」와의 외교에서 시작해서 금년에 와서는 종전까지의 내일관계를 청산하는 인상을 주는 외교행동을 개시했다. 즉 동경도지사 「미노베」를 비롯하여

일본의 언론인의 일부를 받아들였고 특히 「미노베」에 대해서는 대대적 환영을 표시했다. 이것은 북한사회가 이미 더 이상 봉쇄 사회로 남아있을 수가 없으며 대내적 충격과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개방사회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대내적 변화의 가능성도 내다 보인다. 그것은 북한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다. 북괴는 1958년에서 시작되어 1970년에 종결된 7개년 계획(3년간 연장되었음)의 정책목표의 하나로 「전면적 기술혁신」을 들었거니와 1971년에서 시작되는 6개년 계획에서도 「기술혁명의 차원제고」를 들고 있다. 봉쇄사회에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과학기술의 결여이다. 북괴가 사상교육강화와 병행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의 필요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교조주의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개인의 창의성과 과학·기술자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과학 기술자 상호간의 토의에 있어서는 북괴집단의 교리가 작용할 여지가 없어진다. 여기에 더해서 중공업 치중의 경제계획은 고도의 효율성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러한 효율성의 양양 역시 비교조직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북괴는 그동안 중공업시설을 원조에 의존해 오다 근년에 와서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있다. 생산품의 항목도 증가시켜야 하겠거니와 생산품의 국제적 시장가격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생산공장의 증설은 그만큼 숙련노동자

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더욱 큰 능률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사회에 있어서 통제메카니즘이 작용하지 못하는 영역이 날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북한사회의 통치구조는 점차적으로 경영관리적 성격을 더욱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질은 수정주의의 태두가능성을 높이고 나가서는 우리가 바라는 자유화의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2. 수정주의 이론과 실제

공산국가는 어느 국가고 간에 자체의 사회주의 로선을 수정주의로 자처하지는 않는다. 수정주의는 미소의 이념분쟁의 화중에서 그 대체적인 성격을 들어냈다. 미소 이념분쟁 과정에서 중공은 소련의 로선을 지적하여 수정주의적이라고 규정했고 소련은 중공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중공의 교조주의를 규탄했다. 여기서는 중공이 수정주의라고 지적한 소련의 주장 내용을 본론과 관계되는 한에 있어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현대적 수정주의의 핵심으로 「평화공존」이론을 들 수 있다. 후루시초프는 등장하자 곧 평화공존이론을 들고 나왔거니와 소련공산당 제22차 대회에서는 「평화공존」을 소련의 대외정책의 기본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이론이 나볼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으로서의 핵무기의 등장을 들 수 있었다.

평화공존이론은 공산주의 사회가 사회기구를 달리하는 제국가, 구체적으로는 자본주의 국가와도 평화적 공존관계를 유지함을 정당화하는 것으로서 공산국가의 획기적 대외정책의 전환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이 공식적으로 표명되기 전에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동구의 공산국가들은 이미 서구의 여러 나라와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들 국가는 이미 그전 부터 비정치적 차원에서 교류를 했고 또 경제적 통상도 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 이론은 「자본주의 국가의 포위상태」에서 비공

산국가들 모두 적대시했던 맑스·레닌·스탈리니즘」을 포기함을 뜻하는 것이다. 평화적 공존 이론으로 공산권과 서방국가와의 긴장대결은 평화적 경쟁으로 바뀌었으며 국제사회에 있어서는 무력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의 기풍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이념상의 변천으로 소련은 서독과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서독과 폴란드간의 우호관계가 성립되었다.

둘째로 혁명이론의 수정을 들 수 있다. 정통적 공산주의 이론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혁명과정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로 전환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대 수정주의는 소련공산당의 「신강령」이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국의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여러가지 방법의 현실적 가능성은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리하여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는 의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며 기본적 생산수단을 인민의 손으로 넘길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로선변경의 결과 소련을 위시한 공산국가는 개별국가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고 외부로부터 혁명을 강요하지는 않게 되었다. 사회주의에로의 혁명은 이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이행으로의 가능성을 갖게 된 셈이다. 여기에는 물론 전술적 의미가 포함된다. 즉 비공산국가내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완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국가는 이제 직접 타국의 공산혁명을 강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비공산국가내에 있어서의 공산당들도 의회주의를 통한 권력장악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령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있는 서구의 몇몇 국가나

일본에 있어서의 공산당은 의회주의 테두리속에서 평화적 사회주의 건설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계급이론의 수정이다. 1961년의 소련공산당 신강령은 공산주의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모든 인민이 소유하고 모든 인민이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누리는 계급이 없는 사회기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새 규정에 의하면 공산국가는 이제 프롤레타리아국가 아니며 공산당도 프롤레타리아 정당이 아니라 전인민의 정당이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산국가가 전인민의 국가로 변천해 가는 양상은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를 위시한 동구의 각 공산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경제체제는 이미 상당히 앞선 구매자 시장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유고슬라비아의 코문(Commune) 제도는 이미 국가와 독립된 완전한 자치단체로서 모든 국민은 코문(Commune) 단위로 생산활동의 이윤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소련의 경제체제는 자유화의 정도에 있어 뒤지고 있기는 하나 점진적인 변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산사회의 경제체제가 판매자시장(seller's market)으로 부터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천해 간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물질 및 정신적 복지의 혜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입증한다. 소련은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한 경제체제를 지양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매우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소련사회에 있어서 「미재의 사치품이 현재의 일상품」(The Economist지 1971년 12월 4일자)이 되고 있음은 이러한 추세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 수정주의의 주요내용은 모든 공산국가의 공통된 노선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또 수정주의의 실천도 나라에 따라서 상이하다. 이러한 수정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반발을 표시해 오든 중공도 이제는 국제무대에 새로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종전까지의 교조주의적 성격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셈이다.

중공은 국제연합에 가입함으로써 평화적 공존이론에 동조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표시했거니와 이미 표명된 바 있는 주 4원칙도 평화적 공존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도 있다. 더구나 명년초에 미국 대통령의 중공방문을 수락한 이마당에 있어 평화적 공존원칙을 역행하고 있다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중공도 이제는 「소련이 미제국주의와 공모」하고 있다는 이념분쟁을 더 이상 전개할 수가 없게 되었다.

북한사회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공산사회내에서는 여기서 지적한 내용을 갖는 수정주의가 지배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정주의를 조성시킨 공산사회내부의 변화는 당연히 북한사회에

도 조성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수정주의적 이론을 복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공산사회가 수정주의적 방향으로 변천해가면 갈수록 더욱더 교조주의적 방향으로 역행하는 흔적을 보이고 있다.

3. 북한사회의 수정주의 태두가능성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북괴를 둘러싼 공산세계는 수정주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이러한 수정주의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는 유독 교조주의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사회가 이와같이 공산사회에 있어서도 낙후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즉 북한사회는 소련과 중공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이나 소련의 전략적 전조지임을 면하지 못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일제통치가 그대로 북괴집단의 통치로 연결되었기에 북한사회는 일찌기 자유허적 사회의 역사를 갖지 못했다.

북한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민족주의일 것이다. 사실 민족주의는 식민통치시대가 남긴 보편적 이념의 하나이다. 식민지하의 민족주의 이념이 갖는 특성은 그 전투적 성격에 있을 것이다. 식민통치시대의 부정적 이념이 건국후의 긍정적 이념으로 전환되기는 매우 어렵다.

북괴집단은 재빨리 이 전투적이며 부정적 민족주의 이념을 공산주의로 착색함에 성공했다. 공산주의는 본래 민족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으로 민족주의는 북한사회의 민심에 영합하기 위한 한낱 상징에 불과하다. 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당과 당조직의 원리가 되어있지는 않다. 오히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

의의 하위에 있다. 그럼으로 북한사회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와 공산주의적 조직원리를 갖는 당조직이 민족주의에 앞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에서의 민족주의에의 갈망은 상대적으로 공산주의와 노동당의 위신양양의 효과를 갖는다. 북괴는 그동안 민족주의를 빙자해서 북한주민의 복종을 강요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다. 이리하여 민족주의는 마치 북괴집단의 독점적 이념인 것 같이 통용되었다. 그럼으로 북괴가 민족주의를 상징으로 이용하는 한 정선면에 있어서의 수정주의의 태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진다.

다음 통치조직면으로 볼 때 김일성 우상화 정책은 거의 완전무결한 전체주의적 지배를 가능케 하고 있다. 북괴는 일찌기 집단지도제를 포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 있어 유력한 지도자를 모두 숙청하는 한편 개인우상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썼다. 현재 김일성을 둘러싼 측근에는 보잘것 없는 신진엘리트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근의 하부에 당조직과 관료집단이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권력구조는 북한 사회의 철저한 사회화에 성공하고 있다.

여기서 능률적 통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은 측근자들의 과잉충성과 당료나 관료의 타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성은 전통적 사회구조로 인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다. 당료나 관료집단의 타성이 체제유지에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사회가 더욱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사회는 중공업 위주의 그것도 전쟁무기 생산이라는 단조로운 공업화 밖에 이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한 당료나 관료조직으로서도 능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럼으로 북한사회에 있어서 김일성이 통치면에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4 반세기 이상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자기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북한사회에 있어서의 수정주의 태두가능성은 그의 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그는 수정주의의 태두를 극력 경계하고 있다. 남한의 무력통일, 남한에 있어서의 이른바 민족혁명 그리고 남한에 있어서의 계급혁명은 그의 사상의 기초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주주의적 사상은 앞으로 더욱 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정주의를 역행하는 장기집권과 자기우상화 정책을 감행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약점을 엄폐하기 위해서도 수정주의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이 실각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현재의 통치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수정주의의 태두가능성도 없을 것이다.

셋째로 북한의 경제적 발전에 비추어 볼때 약간의 수정주의적 요인의 태두 가능성이 보인다. 북괴는 1958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이른바 7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비록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 기간중 북괴는 중공업의 우선 발전을 시도하는 한편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기했다. 여기서 농업의 주민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로 감소되고 공업의 주민소득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다

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북한사회는 어느 정도 농업사회를 탈피하고 공업사회의 단계에 들어갔음을 입증한다.

공업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경영관리면에 있어서의 능률성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요구하게 된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소련이나 동구의 공산권내에 있어서의 수정주의를 태두시키고 자유화를 추구한 요인은 산업의 발전에 있었다. 산업의 발전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오게 되고 물질적 풍요는 개인으로 하여금 소비재의 선택의 여지를 갖게 한다. 이렇게 개인의 소비성향이 커지면 시장경제체제가 조성되고 시장경제 체제는 경제적 자유를 낳게 된다.

다른 한편 경영관리면에 있어서 능률성이 문제가 될 경우 정통적 교조주의는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능률성은 시간이나 용역 또는 자재의 낭비를 문제로 삼는다. 지금까지의 원시적 공업화단계에 있어서는 능률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북괴는 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 소정의 기일내에 소정의 목표량 달성만을 문제로 삼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 공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능률성을 문제로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능률성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북한 경제는 무한한 낭비속에서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경영관리자도 하나의 전문가이다. 그들은 김일성의 명령보다도 자기의 전문지식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자기의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치적 통제를 벗어난 새로운 전문가 집단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자유의 확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북

한 사회에서는 통치의 명분을 복귀집단이 독점하고 있고 또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자유의 여지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통치체제이고 최소한의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고서는 유지될 수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북한사회에도 개인적 배려가 없을 수 없다.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개인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욕구를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인은 의식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바랄 뿐 아니라 더 나가서 생활수준의 향상도 바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임금의 증액도 바랄 것이며 복지시설도 바랄 것이다.

북괴는 그동안 철저한 금욕주의생활을 강요해 왔다. 그럼으로 북한주민은 다양한 욕구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령 개인소득면으로 볼때 1970년도의 개인소득은 1960년도의 국민소득의 배로 증가했다는 보도는 북한주민에 있어서도 소득의 증가는 현저함을 시사한다. 이것은 결국 개인의 생활영역이 그만큼 확대되었음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반면에 개인은 더욱 가중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즉 개인은 관료주의와 형식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구실하에 더욱 열성적인 과업수행을 강요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사회에서 개인이 받는 물질적 혜택과 개인이 수행해야할 과업과의 괴리는 날로 심해가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물질적 및 정신적 자유의 절대량이 비록 미소하기는 하나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주택시설과 같은 것은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보건시설로 확장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하나 그것을 근거로 북한사회의 자유화 경향을 은위할 수는 없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북괴는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더욱 충실한 노예노릇을 시키기 위해 개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그 배려는 최대한으로 인색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으로 개인적 자유의 확대에 관한 수정주의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자유화 촉진방안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산세계도 이미 수정주의를 지향하게 되었고 대한민국도 수정주의를 중용하는 뜻에서 박대통령은 1970년 8·15 광복절을 마지해서 이른바 8·15 선언을 표명했다. 북한사회의 환경을 이룩하고 있는 다른 공산사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기타의 자유민주국가들이 북한사회가 수정주의로선을 백하고 자유화를 기할 수 있는 유리한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는 독자적으로 체제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반대로 세계의 조류가 평화공존, 평화적 사회주의의 건설 계급투쟁의 지양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조주의적 성격을 더욱 더해가고 있다. 우리는 북한사회가 독자적으로 자유화의 물결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식으로라도 북한사회에 능동적으로 작용해서 자유화 물결을 투입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국제적 힘을 빌어 하는 방법과 우리가 직접 접촉을 통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 외국의 통로를 통하는 방법

현재 북괴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면하기 위해 공산국 이외에도 많은 비공산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상설공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초청 외교 방문 외교도 하고 있다.

북괴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수정주의적 가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교조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중적 외교를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가 외교적 통로의 폭과 심도를 크게 함은 다른 여러가지 의미에 있어서도 매우 진요할 것 같다. 더구나 북괴에 대해서 영향력이 큰 나라와의 공식·비공식적인 통로의 확보는 더욱 진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정부수준의 외교뿐 아니라 민간수준의 친선방문 초청외교의 폭과 심도를 크게 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리는 국민이 갖는 외교적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 보아 우리는 이른바 중립국과 공식적 외교통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외교통로는 더욱 확장되어 공산국과의 접촉의 기회도 개척해야 할 것이다. 이 문계에 있어서는 보안상의 많은 제약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공은 현재와 같은 접촉외교를 갖기 이전에도 중공의 지도층과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가질 수 있었다. 가령 「에드가 스노우」와 같은 인적자원을 가졌다는 것이 이러한 길을 유지함에 있어 크게 이바지 했던 것이다.

외교적 잠재력을 확보함에 있어 일찌기 외국에서 거류한 일이 있는 인사들의 외교적 잠재력을 측정해 둔다는 것도 지금부터 이룩해야 할 큰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 우리와 국교관계

가 없는 나라에서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외교적 잠재력을 검증하며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내적 태세의 정비와 결합해서 외교의 유연성은 매우 건박하다. 우선 대일의교면에 있어 우리는 매우 제한된 외교의 폭을 갖는다. 우리는 집권당인 자민당의 친한파 인사와의 접촉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당계통이나 더 나가서 공산당 계통의 친북파적인 인사와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외교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우리를 좋아하건 미워하건 필요에 따라서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활용할 기회를 꾸준히 포착함이 중요하다. 일본은 우리의 폭넓은 외교활동을 위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더 가중될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정경분리의 원칙을 채택하여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의 접촉을 갖고 있다. 미국과 중공이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었을 당시 미국인의 중공방문이 거의 없었음에 반해서 일본의 민간인은 빈번한 왕래를 했다. 이러한 외교적 잠재력은 비단 중공에 대해서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접촉하지 않고 있는 많은 다른 나라와도 갖고 있다.

다음 우리가 접촉을 시도해야 할 나라로서는 중공과 소련을 들 수 있다. 중공과 소련은 북파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갖는 나라이다. 소련과 중공은 금년의 인도·파키스탄전쟁에의 개입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외교적으로도 대립되어 있으며 대서방국

가 외교에 있어서도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럼으로 우리가 중공과 소련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어느 나라와의 친교관계를 더 깊이하느냐의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의 문제이고 지금으로서는 접촉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우선 타진해 보고 접촉가능성을 개발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고도의 외교기술을 요하며 또한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 이외에도 우리는 동남아 지역의 여러 나라와의 외교면에 있어서의 개편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공과 접경하고 있는 인도와의 폭넓은 공식·비공식적 접촉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동남아 일대와 중동에 있어서는 인도의 교포들이 화교와 아울러 경제적으로 크게 진출하고 있다. 그들이 갖는 국내 외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인도와의 접촉은 소련 사회와의 접촉의 기회를 포착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외국의 힘을 빌어 우리가 북한사회의 자유화를 위한 일차적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국의 힘은 앞으로 우리가 시도하게 될 접촉정책의 주변적 힘이 될 뿐이다. 우리가 북한사회에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지극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북한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인 힘을 보우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길이 매우 어렵기는 하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해빙무드가 감도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외교통로를 통한 북한사회와의 접촉은 과거보다도

더 밝은 전망을 갖는다고 보아진다.

나. 접촉을 통한 방법

북한사회는 봉쇄적 성격을 탈피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자유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공산권내의 수정주의도 북한사회가 갖는 권력구조로 인해서 북한사회를 가까운 시일내에 자유화함에 크게 이바지 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사회의 자유화는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대한민국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사회와의 접촉은 많은 정치적 난관을 수반하며 접촉의 양상과 유형에 있어서도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시기적으로도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도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대결상태가 종식되거나 대결상태가 지속되는 속에서의 접촉을 통하지 않고서는 북한사회의 자유화는 촉진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사회의 자유화는 북한주민을 물질적 및 정신적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인도적 의미와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적 통일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까닭에 그 의의는 막중하다.

북한사회가 자유화될 수 있는 조건은 우선 무엇보다도 수정주의를 받아들이고 혁명이론을 수정함에 있다. 이것은 정치·군사적 해결이 없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여기서 상논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북한사회의 공업화이다. 그러나 북한의 공업화가 전쟁무기조달을 위한 단세포적이며 기형적인 중공업 치중의 기형적 공업화과정을 겪고 있는 이상 그 심도는 이미 상한선에 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의 공업화를 촉진시킬 수도 없다. 그럼으로 사회구조를 변경시키는 방법으로 북한사회의 자유화를 촉진시킬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주민의 생활양식의 변화이다. 여기서 생활양식은 사교양식과 물질의 처리방법을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행동양식을 뜻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북한사회와의 접촉만으로도 크게 불러 이르기 수 있다.

여기서는 접촉을 통한 북한사회의 자유화촉진 방안을 몇가지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회담의 개최

현재 관문점에서는 가족찾기를 위한 예비적 회담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물론 가장 인도적 차원의 회담이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아 회담이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회담에 있어서는 제의된 안전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회담을 한다는 그 자체도 큰 뜻을 갖는다.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전쟁지향적 북한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 준다. 물론 북괴집단은 회담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전자료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회담을 한다는 것파 전쟁을 한다는 것은 정반대되는 일이다. 북괴는 우리측의 추배를 파장해서 선전자료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북괴집단이 제아무리 선전에 광

분한다 하고 또 북한주민이 그 선전을 믿는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남한에 대한 도전성을 촉발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사회의 마스메리아는 기형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TV에 나타나는 우리측 대표의 어떠한 모습도 전투성을 촉발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심한 북한주민은 우리측 대표의 복장이나 거동이 어느 모로나 세련되어 있음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가족찾기 회담과는 별도로 또는 병행해서 복귀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안건을 제안하여 각종의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보안조치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매우 권장할만 하다고 본다.

가령 기상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단순한 조치를 위한 회담도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해 무난하다고 본다. 전문이나 기상에 관한 정보교환은 정확한 기상의 예측을 위해 반듯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정보가 현재 간접적으로 교환된다는 것은 여기서 크게 문제가 안된다. 다만 북한사회의 대표와 우리측의 대표가 회담을 자주 하고 있다는 인상을 북한사회에 알린다는 것이 중요하다.

(2) 인적교류

회담을 통한 접촉이 활발해지면 사람의 왕래를 시작해 볼만하다. 물론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겠고 또 그것의 가능성 여부도 지금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사회가 언제까지나 봉쇄사회로 남아있을 수는 없을 것임을 전제해 볼때 남북간의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

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언론·체육인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실시함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류를 북괴는 매우 주저할 것이다. 우리의 전략적 이점은 북괴의 취약점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괴측에서는 자기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는 민속·예술단의 교류를 먼저 제의해 볼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회집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느냐는 전략적으로 보아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북괴측이 이러한 단계적인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에 응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북괴는 전투적 성격의 일환으로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이른바 패키지 딜링(package dealing)이 생리화되고 있다. 이것은 이번의 남북한 적십자회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 북괴측이 우리의 피스·밀·딜링(peace-mill dealing)의 수법에 말려들어 가게 될 경우 우리는 흥정의 고지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로서 경계해야 할 점은 북괴가 터무니없이 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괴의 제안은 언제나 실현가능성도 없는 정치적 문제를 주로 하는 것이었다. 인사교류가 논의되는 단계에 가서 북괴는 정치인의 교류를 먼저 내세울 수도 있다. 이러한 제안은 제반여건을 고려해 볼 때 북괴측이 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정치인의 교류는 최후단계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보다는 먼저 가장 비정치적 차원에서의 인사교류를 우리가 제안함으로써 기선을

제함이 바람직한 일로 생각된다.

(3) 소비물자를 통한 공작

북한사회의 자유화를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요인은 소비물자의 결핍이다. 북한의 경제정책이 중공업 치중적이고 철저한 통제경제로 정향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의 자유화 촉진에 있어 소비물자를 통한 공작은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공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을 받아오고 있다. 심지어 홍콩을 통해서 송금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소비물자를 북한 사회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남한의 국민이 북한주민을 위해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형태이다. 물론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에게 몫을 박아 보내되 그렇지 않은 국민도 동포애의 표시로 최소한 선물이라도 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것은 호혜적 원칙아래 남북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단제가 지나고 난 후 경제적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교류품목은 전술적 차원에서 가장 소비성향을 양양시킬 수 있는 것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수지란산면에 있어서의 고려는 최대한로 억제해야 할 것이다.

소비재중에서도 식료품은 가장 먼저 선정되어야 할 것 같다.
후진사회일수록 엔겔계수가 높다는 일반적 경제원칙과 음식물의 기
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서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달하고 있는 섬유류도 북한주민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함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상의 세가지 방안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계속적인 효과를
갖는다고 본다.

결 론

북한사회는 수정주의를 강요하는 환경적 여건속에서 철저한 전체주의적 통치의 타성으로 자율적으로 수정주의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북괴가 주장하는 민족주의 이념 북괴집단이 갖추고 있는 통제메카니즘 그리고 북한사회에서 요청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수정주의의 대두가능성을 봉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자유의 영역은 오히려 북괴체제의 유지를 위해 동원되고 있다.

그럼으로 북한사회의 자유화는 외부적, 환경의 작용으로서만 촉진될 수 밖에 없다.

북한사회를 둘러싼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사회를 포함해서 외부적 환경을 구성한다. 그럼으로 북한사회의 자유화를 촉진함에 있어서는 국제사회가 모두 동원되어야 함이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는 국민의 외교적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는 방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협력에는 처음부터 기대의 한계가 있다. 그럼으로 북한사회의 자유화는 우리의 능동적 작용으로만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론에서는 국제적 협력을 구하는 뜻에서 우리의 목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관국과의 접촉 통로의 개척가능성을 타진했다. 여기서 유관국가로는 소련·중공, 일본, 인도를 들었다.

다음 우리의 능동적 작용방법으로서는 접촉을 통한 방법을 중점

적으로 다루었다. 접촉의 가장 조보적인 단계로는 회담의 개최를 들고 다음으로 인적교류 그리고 소비물자를 통한 공작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작용은 모두가 북한사회와 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의 예비 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됨을 전제로 하게 되는 것이다.